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불평등끝장넷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주요 정당 대선후보자에 13개 정책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날 짜 2021. 11. 25. (총 14 쪽)

보 도 자 료

불평등끝장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정책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사회보장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 고용안정·차별 해소 위한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

1.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오늘(11/25)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찬반 입장과 후보자의 관련 공약(입장과 대안)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2. 2022 대선이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정책 실종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거를 대결과 정쟁의 장, 그들만의 잔치가 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불평등끝장넷은 오늘 전달한 공개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불평등끝장넷이 제시한 3대 방향 13개 과제 38개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 최저소득보장 기준 올려 절대빈곤 해소 (3개 실행과제)
-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 보장 강화 (3개 실행과제)
-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 개혁 (2개 실행과제)
-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3개 실행과제)

- 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 확충 (5개 실행과제)
-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2개 실행과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 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임기 중 0.5%) (2개 실행과제)
-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제도화 (2개 실행과제)
- 공공임대주택 2배로 확대 (3개 실행과제)
-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2개 실행과제)
-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전면 적용 (2개 실행과제)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6개 실행과제)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3개 실행과제)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 [발족 자료 보러가기](#)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불평등끝장넷 정책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20대 대선 불평등끝장넷 13개 정책과제 공개질의서 원문

20대 대선 불평등끝장넷 13개 정책과제 공개질의서

I.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1. 최저소득보장 기준 올려 절대빈곤 해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자영업 가구의 빈곤율과 가구들 간의 불평등도가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절대적 빈곤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기준 등 자격 조건으로 인해 2018년 말 기준 약 73만명(48만 가구)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급여 수준도 낮아 공공부조제도의 제기능을 하려면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1)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이른바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빈곤율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절대빈곤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요.

1. 제대로 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찬성		반대	
기타			

2.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의 소득산정기준을 높이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찬성		반대	
기타			

3.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근로능력평가 폐지, 자활 일자리 확대

찬성		반대	
기타			

2.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 보장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단절 등 경제적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소득 보장 정책은 실업, 질병, 상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작 보호가 절실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상병수당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도화되지 못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보장 정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플랫폼 노동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위해 차기 정부 집권 초기에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도입

찬성		반대	
기타			

2.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대로 된 실업부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빈곤층으로 설정되어 있는 수급 자격기준 완화, 1인가구 생계급여보다 낮은 급여수준 인상, 6개월에 그치는 지급기간 확대

찬성		반대	
기타			

3.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화, 유급병가휴가 도입

찬성		반대	
기타			

3.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 개혁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지만 **OECD** 회원국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43.2%**)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준비 중인 국민의 **59.1%**는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낮은 급여수준과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 40%까지 축소될 예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52.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심각한 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은퇴 이후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가 요구됩니다.

- 1)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찬성		반대	
기타			

2. 기초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모두로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

찬성		반대	
기타			

4.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최근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돌봄 관련 복지제도 도입으로 돌봄의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정부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만 내놓았고, 노인·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연령, 장애, 질병 등 어려움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강화 정책이 요구됩니다.

- 1)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요.

1. 돌봄 분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공공요양(시설, 재가) 기본공급률제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초등돌봄 이용률 **40%**까지 확대 등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시설 확대

찬성		반대	
기타			

2.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역할 확립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 위탁 법제화,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시설 공영화 확대

찬성		반대	
기타			

3. 사회서비스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위한 표준임금체계 도입 및 상용직 고용확대

찬성		반대	
기타			

5. 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 확충

한국의 공공병원 비중은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단위인 70개의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약 30곳에 달해 공공의료 취약성 뿐만 아니라 의료격차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공공의료 부족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간병 등 병원돌봄 문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영역의 훼손과 의료이용 행태 왜곡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요.

1.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찬성		반대	
기타			

2. 공공의료확충, 관리일원화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

찬성		반대	
기타			

3. 필수의료 병상 간병의 전면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간병국가책임제 도입

찬성		반대	
기타			

4. 온실가스 감축, 과도한 의료비 축소 등을 위해 치료효과 없고 비싼 영리적 치료행위, 의료기기·의약품 퇴출

찬성		반대	
기타			

5. 의료인력확충 :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수 최저기준 제도화, 공공의과대학 신설 및 국립의대 정원 확대하여 의사 인력 확충, 지역공공의료기관 의사의무복무제, 인력기준 미달 병상 퇴출

찬성		반대	
기타			

6.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코로나19를 거치며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실제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OECD 평균 20.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은데다 향후 늘어난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등을 감안하면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9년 기준 20.1%이고 국민부담률 26.7%로 OECD 평균이 각각 24.9%, 26.7%임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증세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높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증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 1)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정책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1. 복지 자원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소득자 대상 증세 추진(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

찬성		반대	
기타			

2. 실효성 없는 비과세 감면 제도 단계적 폐지(임기 중 매년 축소 목표 수립) 등

찬성		반대	
기타			

II.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1. 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임기 중 0.5%)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1.8%(60대 이상 78.1%)로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2018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0.82%(OECD 평균 1.07%), 실효세율은 0.16%(OECD 8개국 평균 0.54%)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은 소득에 비해 격차가 크고, 상위계층의 집중도 또한 심각한데, 이러한 격차와 불평등은 자산 중 주택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장기적으로 2018년 기준 미국 수준인 1%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차기 정부 임기 중에 OECD 평균인 0.5% 수준까지 상향하는 정책의 추진이 요구됩니다.

- 1)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오.

1. 자산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주택분 과세 기준 강화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 원을 다시 9억 원으로)

찬성		반대	
기타			

2. 토지 소유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종부세 토지분 세율 강화

찬성		반대	
기타			

2.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제도화

2018년 기준 184.5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초과이익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불로소득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와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위 10%의 집값이 하위 10%의 47배에 달하는 등 자산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LH 사태로 다시 확인된 것처럼 부동산 투기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할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 1)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제도화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오.

1. 토지 투기를 예방하고 유헴토지의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초과이익세 부활(초과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기간 3년, 30~50% 세율로 과세)

찬성		반대	
기타			

2.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 강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찬성		반대	
기타			

3. 공공임대주택 2배로 확대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전체 재고주택의 **20% 이상**(비엔나 **40%**, 암스테르담 **35%**, 파리 **20%**, 베를린 **19%**)을 정부가 보유하는 장기임대주택제도를 운영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70만호**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양전환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제외하면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0만호**에 불과합니다. 이 수준으로는 전국 **227만** 가구나 되는 주거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민간 중심의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가격 변동이 큰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더욱 늘려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 1) 공공임대주택 확대 목표와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요.

1. **110만호(2019년 기준)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년 내 100만 호 추가 공급**

찬성		반대	
기타			

2.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택지는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장기공공임대주택 **50%** 이상)

찬성		반대	
기타			

3.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교차보조 방식 탈피,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을 확대해 재원 조달

찬성		반대	
----	--	----	--

기타	
----	--

4.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2020년 기준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 자가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은 10.6년인 반면,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기간 2년 이내인 가구 중 임차가구는 62.1%입니다. 이는 임차가구일수록 주거안전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임대료인상을 상한제를 갱신 계약으로 한정하여 신규임대차 인상률과 큰 격차가 발생하면서 세입자의 주거부담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반면, 독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임대기한이 없는 장기 임대차를 기본 방향으로, 표준(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하여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1) 국민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각자 생활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요.

1.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

찬성		반대	
기타			

2. 지역별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도입

찬성		반대	
기타			

5.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전면 적용

2014년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후 서울의 민간택지 분양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2018년 5월에서 19년 5월 사이 12.54%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분양가가 다시 주변 시세를 높이고, 높아진 시세가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자 2019년 10월부터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분양가상한제의 가격 거품을 빼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1) 분양가 상한제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구 일부 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전체에 적용

찬성		반대	
기타			

2.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택지비 산정 기준 개선,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축비 산정기준 개선

찬성		반대	
기타			

III.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1.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에 있어 기본권 보장이 매우 취약하여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더믹을 거치면서 비정규직 수와 비율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과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많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불법파견 방지 제도화,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1)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요.

1.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금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찬성		반대	
기타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찬성		반대	
기타			

3.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찬성		반대	
기타			

4.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개선

찬성		반대	
기타			

5. 노조법 상 원청사용자의 개념 확대해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찬성		반대	
기타			

6.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하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찬성		반대	
기타			

2.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어 이들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야근·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폐지 국민동의청원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수십년간 차별 받아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입법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 관련해서 불평등끝장넷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요.

1.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찬성		반대	
기타			

2.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찬성		반대	
기타			

3.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법 전면 적용

찬성		반대	
기타			